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甲은 인력자원이다.
-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乙은 인력자원이다.
-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 ④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하는데, 동물사료는 물적자원에 해당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ㄷ.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비축대상물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대상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 ① 국무총리 |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
| ③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총리 |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의 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 ㄷ.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 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③ 시·도지사등은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와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이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이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민방위협의회의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로서 민방위기획위원회를 둔 경우, 그 분과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ㄴ.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ㄹ. 각 분과위원회의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시·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 ③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액과 동일하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와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월 ()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매년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46

② 48

③ 50

④ 52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친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대요원은 소집일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직장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 ② 민방위사태가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은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할 수 있다.
- ③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응급조치권자는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의 부분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되,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 직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ㄴ.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예비군 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 ㄹ. 직장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준이 6개월 이상 계속되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0.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ㄴ.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장이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 ㄷ.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매년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ㄹ.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연 2회 선발하며,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육군참모총장 등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에게 보낼 때에는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 ④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③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예비군대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된 훈련 일정(훈련소집일은 휴일에 해당)을 알고 난 후,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벌칙과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단위: 원)

- ㄱ. 지역예비군대원 甲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류를 마치고 2024년 4월 1일에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8일까지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 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 ㄷ.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丙은 질병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하였는데, 해당 질병은 丙이 동원 연기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 ㄹ.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동생을 대신하여 쌍둥이 형인 丁이 훈련을 받았다.

- ① 5,700만 ② 4,700만 ③ 4,500만 ④ 3,500만

문 24.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보상심의회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를 거쳐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15일 이내에 | 지체 없이 | 30일 이내에 | 60일 이내에 |
| ② | 15일 이내에 | 10일 이내에 | 60일 이내에 | 90일 이내에 |
| ③ | 30일 이내에 | 지체 없이 | 30일 이내에 | 60일 이내에 |
| ④ | 30일 이내에 | 10일 이내에 | 30일 이내에 | 90일 이내에 |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甲과 乙은 2021년 3월 8일에 있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甲은 당일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負傷)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甲은 부상 치료기간인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생업인 제과점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乙은 훈련 당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 총기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乙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해 2023년 12월 8일에 사망하였다.

— <보 기> —

- ㄱ. 甲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기간(2021. 3. 8. ~ 2024. 2. 23.)을 지급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ㄴ.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ㄷ. 甲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ㄹ. 乙이 통원치료 중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6. 예비군법령상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에만 속한다.
- ③ 수탁경찰서장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군(軍)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다.
- ④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한 임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감독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ㄷ.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즉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
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에는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ㄷ.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ㄹ.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ㅁ.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시, 장소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물 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무총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ㄹ.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배우자 乙, 모친 丙과 함께 살던 중, A시의 시설인 어린이공원에 재난이 발생하자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甲의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복구 과정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甲은 사망하였다.

— <보기> —

- ㄱ. 甲의 파손된 휴대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참여 당시 휴대폰의 교환가격으로 보상한다.
- ㄴ. 甲의 유족으로 乙과 丙만이 있다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乙과 丙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ㄷ. 乙이 포태 중이었다면, 그 태아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ㄹ. 甲에 대한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 ㄴ.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 중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 ㄷ. 해당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ㄹ.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ㅁ.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반기별로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甲은 2020년 2월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7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3년 3월 20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ㄴ. 乙은 2021년 3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4년 2월 3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ㄷ.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丙은 2024년 5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丙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ㄹ. 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험구역 내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사이에 3개월 이상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3회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	○	X	X
②	X	X	○	○
③	○	X	○	X
④	X	○	X	○

법령 I - 헌법

문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
- ②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이며,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 ④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문 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 전문(前文)은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ㄴ. 1972년 개정헌법이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정된 헌법이다.
- ㄷ.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 제10장 제128조 내지 제130조는 일반법률의 개정 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동 헌법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ㄹ. 헌법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대통령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
- ② 헌법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 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 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 5.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있으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②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조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합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 ③ 국가는 경우에 따라 조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하는데, 비구속적 합의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국회의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문 6.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 ③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제한되므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인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없다.
- 문 7.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연인인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법인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성질상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까지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8.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기초연금법」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자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국적을 이탈하려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직계존속의 행위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요건으로 병역의무 해소의 요구라는 불이익한 처우를 결정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므로 연좌제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문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허가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②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특정한 사실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으로서,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판단하여 소음유지명령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다른 사회 구성원과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며,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 10.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전화나 우편물 등을 통하여 교환되는 통신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 ㄴ.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므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 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의혹만으로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수사방식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④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문 1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목적이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이라는 목적에 제대로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거나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 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 ③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은 양심이라 할 수 없다.
- ④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문 1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경비원이 수행해야 할 경비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특수경비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 없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문 14.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 ③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 ④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문 15. 탄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 ②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지만,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 ③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 ④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